

# “北,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선 안돼”

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 발언

“남북관계 난관 조성  
상황 엄중할수록  
6·15 선언의 정신  
성과 되돌아 볼 필요”

“남과 북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남측과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며 대남(對南) 군사행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됐다”며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 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의 경계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 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

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 더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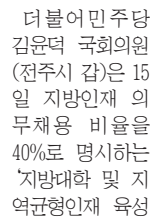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려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 40% 명시

민주 김운덕 의원, ‘지방균형인재 육성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운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법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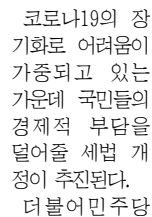
당초 취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상향조정,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 추진

민주 이상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시 을)이 21대 국회 민생법안 2탄으로 지난 12일 재난예방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세금에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출산장려라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방역용품의 구입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 할당 공급량 전수 구입 시 연간 156만원이 소요된다.

국민들이 마스크와 함께 구입하고 있는 손소독제 등 다수의 방역 위생용품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재난 예방을 위한 가계 누적지출은 연간 수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호상 기자

현재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난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상직 의원은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에게 개개인의 예방 참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방 비용까지 부담을 지우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서민경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코로나19 민생법안’을 통한 국민복복을 하고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남은 예비비로 재해 피해 복구해야”

두세훈 도의원, 주말 도내 집중호우 따라

전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원주 2)의원이 15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6월 13~14일 전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의 복구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끈다.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에 181.7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익산시 158.2mm, 장수군 116.7mm, 전주시 112.4mm, 무주군 104.0mm, 김제시 102.5mm 등의 순으로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완주군의 경우 30동가로 침수면적은 벼 15ha, 상추·굴 등 기타 12.8ha로 총 27.8ha에 달한다. 전라북도 전체 합계는 1,346가구, 침수면적은 840.4ha에 달한다. 이러한 농가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투입해 침수 농작물의 신속한

물떼기 및 농작물 피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두 의원은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의 농업재해 보상 복구비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두 의원은 “최근 전북에는 폭우피해 뿐만 아니라 무주·장수 우박피해, 전북지역 냉해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이 일어났다”며, “향후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도 예상되는 만큼 자연재해 취약농가 및 피해보상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 농가 발생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침수피해 현장 찾아 해결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최근 발생한 김제와 부안지역 농경지 침수와 해수 역류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태를 점검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부안 호안방조제와 곰소항 상습 수해지구, 보안면 해수역류현장 등 3곳을 방문해 해수 역류로 인한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15일 김제지역 침수 피해 현장인 7곳 등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큰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와 김제시·부안군,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